

세월호 3주기



세월호 미수습자 9인의 얼굴



13일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는 글이 선명한 노란 옷을 입고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세척 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3주기는 다가왔지만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애들아, 이젠 돌아오렴”

침몰 원인·구조 실패 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 맞은 세번째 봄... 안전사회 넘어 국가개조 출발점으로

관련기사 2·6·7·16면

오는 16일 3주년을 맞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참사를 단순히 국민안전의식 제고, 국가 및 지자체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으로만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후진국형 안전사고 발생과 구조·수색 시스템의 결함만이 아니라 피해가족에 대한 부당한 처우, 철저하지 못한 수사, 좌절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규명, 비정상적인 인양 등 이후 계속된 '정부의 의도된 실패'는 국민의 불신만 높였고, 참사의 충격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이사를 관할 책임자로 하는 시민안전실과 도민안전실을 신설,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참사 이후 지난 3월 10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안전의식 제고, 국가·지자체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 참사가 안고 있는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사 및 선주의 처벌, 행정시스템의 개선, 신규 시설 설치로, 그동안 세월호의 침몰, 수습, 조사, 수사, 인양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은 감했다는 것이다.

임선숙(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를 위한 모임 전 광주·전남 지부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무한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되풀이하고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사고 이후 국가권력이 나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 등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미흡, '관제대모' 등 관이 민간 부문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관치'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도 시급하다.

민병로(52)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으며, 이를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과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정수의 국민이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이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이야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서명, 희생자 추모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육상 거처를 끝낸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13일 세척작업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붙은 文·安 '장미전쟁'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선대위 구성...이해찬·김부겸 포함
국민의당, 15일 국회의원·지역 인사 중심 선대위 출범 예정

① '선택 2017' 대선 D-25

5·9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15·16일)을 앞두고 각 정당이 중앙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지역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본격적인 '장미 전쟁'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5면> 특히, 각 정당은 대선 후보 등록 전후에 형성되는 여론 흐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3일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의원 등 중랑급 인사들이 포함된 200여명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5일 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비금가는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최근의 여론 흐름과 관련, 치열한 고공전을 펼치고 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안 후보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사실상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자체 분석

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이후,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민심이 문 후보 측으로 결집하면서 지지율에서 10% 이상 격차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자체적 동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 번 하락세로 진입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문재인 '대세론'이 다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동력이 아직 굳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오히려 비문 정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민심 전반에 지켜보자는 흐름이 있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이 전반적인 정세를 빚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치러진 호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완승을 거둔 것을 근거로 호남 민심이 사실상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이 이미 판단을 내렸고 지난 총선과 같이 대선에서도 안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안 “北 선제타격 안된다”

한국기자협회 대선주자 토론회
누가 되는 5·18정신 헌법전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3일 서울 삼삼동 SBS 공개홀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안보와 경제, 상호 신상 검증 등 각종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관련기사 4면> 대선을 26일 앞두고 첫 5차 대면을 한 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상대 후보의 주장과 공약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상대의 약점을 집중 파고들면서 시종 일관 불꽃 튀는 토론을 이어갔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과 관련, 후보들은 대체로 선제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이 이뤄졌을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방점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동의없는 일방적인 선제타격이 안 된다"고 알려 보류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시간평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비폭력 평화혁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